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

- ◆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*으로 근로자들의 입원·격리 및 다수 사업장의 휴업 가능성이 있어, 사업장 지도방안을 마련

* 1.29 기준, 국내 확진환자 4명, 조사대상 유증상자 183명(검사중 28명, 격리해제 155명)

□ 휴업수당 제도

- (법률)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*의 70% 이상 수당 지급 (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),

* 평균임금의 70%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

- (행정해석)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·과실(민법상 귀책사유)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,
 - 지배·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

□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

-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미발생

- ① (일반 사업장) 근로자 중 확진환자,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(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)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
- ② (병원)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(휴진)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
- ③ (학교 등)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,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

-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, 병원·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발생

- ① (일반사업장) 근로자 중 확진환자,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
- ② (여행사, 병원, 숙박업종 등)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·고객감소·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

□ 휴가 제도

- 입원·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, 취업규칙·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 가능
 - 다만,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*

*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(현재까지는 해당 고시 없음)

□ 사업장 지도방향

- (휴업수당) 상기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되,
 - 휴업수당 미발생 사업장에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
 -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 병행(고용센터와 협조)
- (유급휴가) 단체협약·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규정 등을 확인하여
 -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고,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 처리하도록 권고
 - 한편,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 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가비용을 지원*받을 수 있음을 안내(보건복지부로 문의하도록 안내)

*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

<참고: 「감염병예방법」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>

- △ 법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 -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·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△ 시행령 제23조의2(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)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*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* 메르스의 경우,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,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